

경제형별 합리화 2차 방안 주요과제

1 금전적 책임성 강화



■ **(대규모유통업법)** A 대형마트가 자사 납품업자의 B 대형마트 납품계획에 대해 매장 철수 압박 등으로 B 대형마트와의 거래를 방해한 경우
 ▶ **(현재)** 징역 최대 2년, 벌금 최대 1.5억원
 * 즉시 형벌 + 시정명령 + 과징금 병과 가능
 → **(개선안)** '즉시 형벌'은 폐지하고, 시정명령·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만 처벌(징액과징금 5억~50억원 상향)



■ **(대리점법)** 자동차용품 제조사 C가 대리점별 마진을 파악을 위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카센터 거래내역을 본사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강제한 경우
 ▶ **(현재)** 징역 최대 2년, 벌금 최대 1.5억원
 * 즉시 형벌 + 시정명령 + 과징금 병과 가능
 → **(개선안)** '즉시 형벌'은 폐지하고, 시정명령·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만 처벌(징액과징금 5억~50억원 상향)



■ **(하도급법)** 건설사 D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계약을 맺은 중소 시공업체 E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
 ▶ **(현재)** 벌금 최대 하도급 대금의 2배
 * 즉시 형벌 + 시정명령 + 과징금 병과 가능
 → **(개선안)** '즉시 형벌'은 폐지하고, 시정명령·과징금 병과 후 시정명령 미이행시만 처벌(징액과징금 20억~50억원 상향)



■ **(위치정보법)** E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기지국 접속 기록(위치정보)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
 ▶ **(현재)** 징역 최대 1년, 벌금 최대 2천만원
 → **(개선안)** 형벌은 폐지하되, 과징금 한도 상향(징액과징금 4억 → 20억원 등)

2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



■ **(관광진흥법)**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법인 F가 상호명을 변경하면서 테마파크업 허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 ▶ **(현재)** 징역 최대 1년, 벌금 최대 1천만원
 → **(개선안)** '즉시 형벌'은 폐지하고,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만 처벌



■ **(대기환경보전법)** 자동차제작자 G사가 판매실적 등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경우
 ▶ **(현재)** 벌금 최대 3백만원
 → **(개선안)** 형벌 폐지 + 과태료 전환(최대 3백만원)
 * 단, 거짓자료 제출시 기존 형벌 유지



■ **(전파법)** 중소기업 H사가 무선방위측정 장치보호구역 내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공장시설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증축한 경우
 ▶ **(현재)** 징역 최대 1년, 벌금 최대 1천만원
 → **(개선안)** '즉시 형벌'은 폐지하고,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만 처벌



■ **(자본시장법)**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기업 I사가 상호명에 '금융투자' 단어를 포함한 경우
 ▶ **(현재)** 징역 최대 1년, 벌금 최대 3천만원
 → **(개선안)** 형벌 폐지 + 과태료 전환(최대 3천만원)

3 민생경제 부담 완화



■ **(자동차관리법)** 승합차 소유자 J가 튜닝 승인을 받아 캠핑카 개조작업을 완료한 후 튜닝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
 ▶ **(현재)** 벌금 최대 1백만원
 → **(개선안)** 형벌 폐지 + 과태료 전환(최대 1백만원)



■ **(동물보호법)** 애견미용실 업주 K씨가 직원을 새롭게 채용한 후 동물미용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 ▶ **(현재)** 징역 최대 1년, 벌금 최대 1천만원
 → **(개선안)** 형벌 폐지



■ **(자연공원법)** 국립공원을 등산하던 L씨가 등산 중 뜨거운 라면국물을 나무뿌리에 부어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
 ▶ **(현재)** 징역 최대 1년, 벌금 최대 1천만원
 → **(개선안)** 징역형 폐지



■ **(무인도서법)** 개발가능무인도* 소유자 M이 시·도지사에게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무인도에 펜션을 건축한 경우
 * 절대보전·준보전·이용가능 무인도서와 달리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
 ▶ **(현재)** 징역 최대 1년, 벌금 최대 1천만원
 → **(개선안)** 형벌 폐지 + 과태료 전환(최대 1천만원)

※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이미지임